對 外 秘

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

1. 검토 배경

■ 2. 9.(월) 14:00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선고 예정

● 2014. 9. 11. **1심 판결** 선고 ⇨ **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무죄**, 국정원법 위반 부분 유죄

- 재판장 **이**○○ 부장판사: 연수원 21기, ○○대, 서울 ○○고

● 쌍방 항소 ⇨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호로 **항소심 계속 중**

- 재판장 **김**○○ 부장판사: 연수원 20기, ○○대, 대전 ○○고

- 주심 **김**○○ 판사: 연수원 24기, ○○대, 광주 ○○고

- ※ 해당 재판부는 최근 **나꼼수 김○○·주○○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**

■ **선고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 필요**

● 대내외적으로 각 상황별 **대응 시나리오** 마련

2. 최근 정세 분석

가. BH·여권

■ **국정 난맥상 계속 ⇨ 지지율 하락, 조기 레임덕 가능성 제기**

●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**증세 논란 등**으로 국정 난맥상 계속

- 문건 유출·비선 국정 개입 논란 ⇨ 민정수석 교체 등 인적 쇄신 단행하였으나, **국무총리 후보자**의 신상과 관련하여 또다시 **이상 기류 발생**

- **연말정산·건강보험 개혁** 논란 ⇨ 대통령 **지지율 하락**의 주요 원인 제공

- **경제·통일 골든타임** 선언 ⇨ 난국 타개를 위해 **정치적 논의는 자제·기피**

● **신임 원내대표** 선출 ⇨ **朴心이 반영되지 않고** 오히려 레임덕 우려

- BH와 새누리당 사이에 **당·청 관계의 주도권**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경전

- 2. 13.께 소폭 개각과 BH 정무 특보단 인선 예정

-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, 국토교통부 장관에 허남식 前 부산시장, 통일부장관에 권영세 주중 대사 등 거론

- 김기춘 **비서실장의 퇴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** ⇨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함, **인적 쇄신 마무리되면 퇴진**할 것이라는 전망 여전함

■ **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⇨ 환영·안도**

- BH ⇨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**감사 의사를 전달**하였다는 후문

- **새누리당 ⇨ 큰 짐을 덜었다**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, **야당에 역공**

- 공식 논평 ⇨ "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**야당의 실패한 대선 개입 정치 공작**이었음이 명백해졌다...대선 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**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머리 숙여 사과할 것**을 강력하게 촉구한다"

나. 야권

■ **새정치연합 신임 당 대표 선출 ⇨ 혼탁·과열로 분열 양상**

- 문재인 신임 당 대표 당선 ⇨ **對 BH 공세 강화**

- 수락 연설에서 "**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선포**"

- 한편, 막판 '룰 변경' 논란 등 **계파간 대결 분위기**로 **후유증 우려**

- 박지원 후보 ⇨ "**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...**"

- 문재인 대표와 박 후보의 득표율 45% vs. 42% ⇨ **격차가 3% 불과**하여 **후유증도 극대화**

- **봉합을 위한 시간, 설 연휴** 등으로 한동안 활발한 활동은 어려울 듯

■ **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⇨ 비판**

- 새정치연합 ⇨ **거세게 비판**

- 공식 논평 ⇨ "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**궤변**으로 **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**했다...헌정 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**수치스러운 판결**"

다. 언론기관

■ **진보 언론 ⇨ 대법원에 비판적 논조 유지**

- 특히 **대법관 청문회**를 앞두고 **경향신문을 중심으로 결사항전** 분위기

■ **보수 언론 ⇨ 그다지 우호적인 분위기 아님**

- **상고법원** 입법 추진에 대한 **싸늘한 분위기**
- 최근 최○○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하여 **비판적 논조** 계속

■ **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⇨ 진영 논리에 따라 엇갈림**

- **진보·중도** 언론 ⇨ 판결의 **논리에 의문 제기**

- 특히 최근 1심 재판장이었던 **이○○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**된 것에 대하여 **비판적 보도** ⇨ **한국일보, 로이슈, 아시아경제 등**

- **보수** 언론 ⇨ 결과적으로 정국 혼란 불러온 **검찰 비판**

라. 사법부 내부

■ **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예의 주시**

- 선고 다음날인 2. 10. **전후**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가 **최대 관심사**
- **박○○ 대법관 후보자**의 전력 논란으로 인한 **내부 불만 축적** 중

- 대법관 후보자가 **역사적 사건에 연루**되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**부정적 여론** ⇨ **청문회 과정**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**공개적 표출 가능성**

■ **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⇨ 강한 내부 논란 발생**

- **김○○ 부장판사** ⇨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표명하여 **논란 촉발**

- 판결에 대한 **여론 관심 증폭** + 법관 사회의 분열에 **선정적 관심마저 집중**

- 이후 **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**을 받음

- 하지만, 의외로 **적지 않은 수의 법관들**이 김○○ 부장판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**심정적 동조**를 보내었음

3.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

가. If 항소기각 판결[1심 결론 유지] ⇨ 파장 최소화

■ **BH·여권 ⇨ 외부적으로 덤덤한 반응, 내부적으로 안도 예상**

● 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므로 큰 관심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

- **상고심 결론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 것**으로 전망

■ **야권 ⇨ 비판 태도 유지 내지 덤덤한 반응**

● 1심 판결 선고 시와 마찬가지로 **비판하는 입장 표명**할 것

- 다만, **전당대회 바로 다음날**이므로 그 정도가 **그리 심하지 않을 것**으로 전망

■ **언론 ⇨ 1심 판결 당시 분위기 유지**

● 1심의 결론이 유지된 것이므로 **큰 기사거리로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**

- 다만, 1심 판결 당시의 상당한 논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다루어질 듯

■ **사법부 내부 ⇨ 큰 갈등이 촉발되지는 않겠으나 기존 불만 세력의 불만은 심화 가능성**

● **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음에 따라** 1심 판결 당시와 같은 논란·갈등 양상이 **재발되지는 않을 것**임

- **게다가 금주 내 법관 정기 인사**가 이루어지면 **관심은 크게 분산·약화**될 수밖에 없음

● 하지만, 1심 판결 당시 불만을 가졌거나 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가졌던 구성원들은 **불만이 더욱 응축·심화**될 가능성 있음

- **박○○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불만과 시너지 효과**를 발생시킬 수 있음 ⇨ **인사청문회를 전후로 표출 여부가 결정**될 것임

- 다만, 김○○ 부장판사 **징계로 인한 교육 효과**에 따라 실제로 불만 표출에 나서는 데에는 **상당히 조심·자제**할 것으로 보임

나. If 파기·공직선거법 유죄 판결[1심 결론 번복] ⇨ 상당한 파장

■ BH·여권 ⇨ 극심한 곤경에 처함

● 정권의 정당성에 **회복할 수 없는 상처**를 입게 됨

- 이미 최근 지지층의 지속적 이탈로 **사실상 "지지율 제로" 상태**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함 ⇨ "현재 남아있는 20% 후반 정도 비율의 지지는 박정희 향수와 경제 개발 세대의 자부심에 의한 것 불과"[**안○○ 명예교수**, 2. 4. MBC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**'신동호의 시선집중' 전화 인터뷰** 내용]

- 이러한 상황에서 **정권 탄생 과정의 정당성 자체마저 의심** ⇨ 박 대통령이 **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**한 상태 초래

- **게다가 야권**은 전당대회를 통해 확보한 **새로운 당 대표 체제의 선명성·언론 주목도**[이른바 **컨벤션 효과**]와 최근 BH·여권의 곤란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**설 명절 기간 동안 지지 기반을 확장·확보**하기[이른바 **차례상 효과**] 위하여 **전력투구**할 것임[이미 '**전면전 선포**'] ⇨ **유례없는 강공 비판**을 감당해야 하는 큰 부담

● **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**를 향하게 될 가능성 큼

- **[시나리오❶: 직접적·적극적 조치] 전면적 사법개혁 시도**

  ▪ **적극적 가능성** ⇨ 최근 발생한 최○○ 판사 사건, 대구 유 모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**부정적 국민·언론 여론** 존재, **전교조 집행정지 사건** 등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**BH의 불만**은 이미 상당히 누적된 상황

  ▪ **소극적 가능성** ⇨ 올해를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선언하는 등 **경제 올인 정책** 예정, 최 모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만으로 갑작스레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**다소 뜬금없음**, 사법부에 대한 **보복성 개혁이라는 비판** 우려

- **[시나리오❷: 간접적·소극적 조치]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,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**

  ▪ **적극적 가능성** ⇨ 특히 대법원의 중점 추진 사법정책인 **상고법원안**의 경우

설치 시 김○○ 부장판사와 같은 **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법관의 중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연상 작용**을 일으켜 **극도의 불신**을 받게 될 것임, 사법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시 **예산 편성에 비협조적인 태도**를 보이는 것은 BH의 **전통적인 사법부 견제 방법**이었음

- **소극적 가능성** ⇨ 간접적·소극적 보복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은 **거의 없음**, 다만, 여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**시기적으로 조절**할 가능성은 있음

■ 야권 ⇨ BH·여권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 예상

● **정권을 향한 총력 비판**에 나설 것임

- 특히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에 선출될 경우 **'지난 대선의 직접 피해자'**로서 **'정당한 보상, 원상복구'의 이미지·명분**을 구축하려 할 것임 ⇨ 직접적으로 대선 불복 운동을 펴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, **차기 대선 승리의 역사적 개연성·정당성**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

- 게다가 야권에 유리한 결론은 **향후 대법원 판결 시까지 허락된 한시적 상황**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 ⇨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**각종 劇的 공세**를 취할 것으로 보임

● **사법부에 대하여는 다소 우호적인 태도**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

■ 언론 ⇨ 진영 막론하고 사법부 비판 예상

● **보수** 언론 ⇨ **판결 결론에 관한 불만**을 정면으로 표출할 것

- **김○○ 부장판사를 징계**한 것을 들먹이며 항소심 판결을 **자가당착·모순**적인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 있음

● **진보** 언론 ⇨ **판결 결론에 대해서는 환영**할 수 있으나, 김○○ 부장판사 **징계의 문제점을 제기**할 가능성이 큼

- 김○○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**부당**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것임

■ 사법부 내부 ⇨ 큰 갈등 촉발 가능성

● **상당한 내부 갈등** 발생할 것임

- 김○○ 부장판사 징계 당시에도 **수면 하에서 법관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·고민**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⇨ 판결 결론이 뒤집히면 과연 김○○ 부장판사의 견해 표명이 **비난 가능성 높은 것이었는지, 징계 수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논란**이 필연적일 것임

- 한편, 일부 언론에서는 **이○○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**을 놓고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⇨ **법원노조로부터 이에 관한 비슷한 문제 제기**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● 한편, **1심 판결에 대한 불만 또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 논란에 대한 불만은 다소 완화**될 가능성도 있음

- 1심 판결에 동조하지 못하던 세력은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**회복·치유**되었다고 생각할 것임 ⇨ 공식적 문제 제기 등 **행동에 나설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**할 가능성 있음

4. 대응 방향

가. If 항소기각 판결[1심 결론 유지] ⇨ 사법부 내부 분위기 결속 중심

■ **BH·여권 ⇨ 별다른 조치 불필요**

■ **야권 ⇨ 별다른 조치 불필요**

● **비판적 입장이 그리 강하지도, 오래 가지도 않을 것**임

■ **사법부 내부 ⇨ 불만·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필요**

● **코트넷 게시판**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·등록 여부 **지속적 확인**

- 특히 **코트넷운영위원회 간사[정보화심의관]**는 당분간 **24시간 감시 체제**를 유지할 필요성 큼 ⇨ 문제 있는 글이 게시될 경우 **즉시 임시조치** 여부를 검토·집행하여 **파장을 최소화**하여야 함

● **법관 정기 인사**는 최대한 **조속한 시점**에 실시할 필요 있음

- 정기 인사 발령 시 새로운 임지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**법관들의 관심이 크게 분산**될 수밖에 없음

- **금주 주말부터는 사실상 설 연휴 기간에 진입** ⇨ 그 전까지 **4~5일이 분수령**이 될 듯함

● **이상 기류 발생 시**에는 **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** 조치

- 법원행정처 **차장 명의**로 각급 법원장에게 **협조 메일 발송**

나. If 파기·공직선거법 유죄 판결[1심 결론 번복] ⇨ BH·여권 대응 중심

■ **BH·여권 ⇨ 신뢰 관계 유지·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**

● **1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**

- 상고법원안에 직접 미칠 부정적 영향**[상고법원 법관 구성과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]**을 제거하기 위하여 **수정안을 제시**

- 제시 가능한 안 ⇨ 상고법원 법관 보임 시 **국회 동의 또는 인사청문회** 절차 실시, **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**[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], 대법원 사건 심사·특별 상고 등의 과정에 **법무부장관 의견 제출** 기회 부여 등

● **2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**

-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**BH는 크게 불만을 표시**하였다는 후문 ⇨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고 '비정상의 정상화'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

- **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**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**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**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⇨ 사법부에 대한 **불만 완화** 효과 + 원세훈 사건도 **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**될 것이라는 **암시 제공** 효과

● **3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**

-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**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**에

는 **최대한 조속히 선고**하는 것이 바람직함 ⇨ **불만·오해 기간 최소화**

- **④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·입장 전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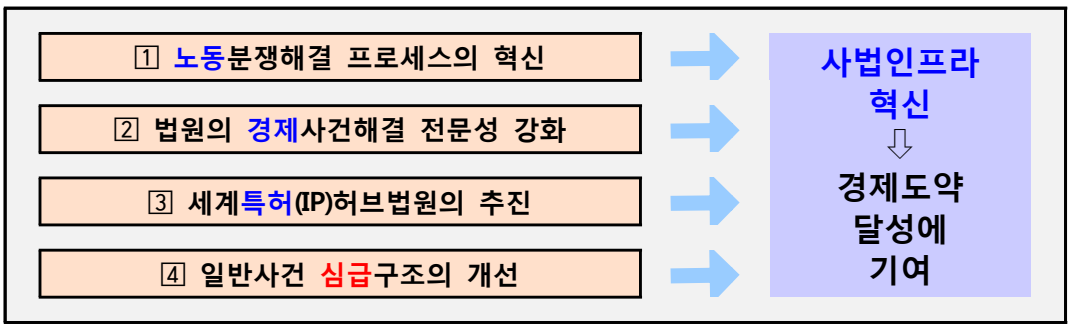
-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**법무비서관실**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**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·설득** 절차를 거침

- 특히 **위 ①, ②, ③ 조치**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**간접적으로 미리 안내**하는 방법을 검토 가능함

- **⑤전면적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'경제도약을 위한 사법인프라 혁신플랜' 논의로 국면·논의 방향 전환을 노력**

- 우선 지금은 전면적 사법개혁을 논의할 **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설득**

- 사법부 변화에 관한 **논의가 불가피하다면** 경제 회복에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건의 ⇨ **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·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**를 제공하여 **국면 전환 시도**



■ **야권 ⇨ 별다른 조치 불필요**

■ **사법부 내부 ⇨ 앞서 항소기각 시의 대책 + 김○○ 징계·이○○ 승진 관련 논란 대비**

- 앞서 **항소기각 시의 대책은 이 경우에도 유효**함

- **코트넷 게시판**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·등록 여부 **지속적 확인**

- **법관 정기 인사**는 최대한 **조속한 시점**에 발표할 필요 있음

- **이상 기류** 발생 시에는 **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** 조치

- 나아가 이 경우에는 **김○○ 부장판사의 징계와 이○○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 대한 불만·논란**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**대비가 필요**함

  - **김○○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조치**에 대한 논란 ⇨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안 [원세훈 사건] 자체에 대하여 취한 **정치적 견해·입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,** 법관이 현재 계속 중인 다른 법관의 담당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데**[법관 윤리 문제]에 대한 것**임 ⇨ 이상 기류 발생 시 **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** 개별 법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가 **전달·설명**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

  - **이○○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**에 대한 논란 ⇨ **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음**, 오히려 **논쟁을 불필요하게 촉발·확대**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, 양식 있는 법관이라면 **법원의 인사가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을 것**임 [끝]